일반논문

과학기술학연구 6권 2호: 103-129 (2006)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선택에 의한 정보격차

정 병 걸*

최근 관심이 약화되고 있지만 정보격차는 정보사회 실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보격차에 대한 상반된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낙관론과 비관론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접근 가능성은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와 같은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경시되어 왔다. 인식이나 의지에 따르는 선택은 접속과 비접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잠재적 이용자의 50% 이상이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선택한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이용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택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이용자들을 정보격차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선택에 의한 비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정보격차, 선택, 정보통신기술, 기술확산

1.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빈자'(have nots)는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 분야의 직업 선택, 전자정부 서비스의 혜택, 정보통신을 통한 높은 수준의 교육 등

* 동양대학교 행정경찰복지학부 교수
전자우편: bkjung@dyu.ac.kr

에서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 내에서의 정보격차는 정보사회의 중심적인 자원인 정보 이용과 점유기회 및 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점차가 논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정보화의 중심적 주제라기보다는 주변적 주제로만 남아있는 듯한 인상이다. 정보격차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거나 이미 해결의 과정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격차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곧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대응이 필요한 해결 곤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양적 격차만이 아니라 질적 격차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정보격차의 심화가 정보사회로의 진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서이종, 2000)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보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저렴한 요금, 국가 전역에서 고도전기통신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속 가능성 보장, 공평한 접속 보장, 저소득자 및 장애자의 접속 보장,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성격의 문제이며 그 양상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해결 방법이나 절차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격차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재도적,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격차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계층, 성, 세대, 지역 간 격차와 같은 불평등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김문조·박형준, 1996). 대부분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도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기반을 둔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내의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구분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주체, 심화정도, 메커니즘 등

의 다양한 차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한국전산원, 2000: 6). 이에 따라 정보 격차의 원인으로는 소유나 경제적 능력에 기인하는 물리적 접근성의 차이와 함께 최근에는 이용 능력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박해광, 2003). 그러나 물리적 접근성이나 이용 능력과 같은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지식이 자동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격차 문제를 객관적 조건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지식이 이전,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용하려는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려는 의지(will)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격차는 성, 연령, 경제적 능력, 교육수준과 같은 객관적 조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에 기반을 둔 주관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적 선택과 정보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자발적 비접속자는 일반적인 우리의 예상과 달리 비접속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실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적 선택이 정보 기술의 확산과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차적으로 수집된 정보 기술 이용과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발적 선택이 정보 기술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가 물리적 접근성이나 이용 능력과 같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라는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적 선택이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적 선택이 정보 기술 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정보격차 문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격차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함의를 제시한다.

2. 기술지식의 확산과 정보격차

1) 기술지식의 확산과 개인적 선택

고전적 기술확산 모형에 의하면 기술채택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은 누적적인 S곡선의 형태(cumulative S-curve pattern)를 보인다고 한다. 실제로 의약품에서부터 산업기계, 옥수수 종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의 채택이 공통적으로 S 모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모든 지식이나 상품이 S자형의 일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Abrahamson, 1991; Rogers, 1995; Ponzi and Koenig, 2002),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상품은 출현, 성장, 성숙과 쇠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적적으로 확산된다. 신기술의 보급 초기에는 기술의 수용이 느리지만 성숙단계가 되면서 기술 채택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가 최종적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기술 채택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S자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세기에 출현한 기술인 전화, 라디오, TV, VCR 등은 모두 S자 형의 형태로 확산이 이루어졌다(Norris, 2001: 30-33).

확산된 기술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확산된 기술지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을 '기술소화'(assimilation)라고 한다. 기술 소화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조직과정으로 조직의 구성원이 혁신을 인지하면서 시작되고 이에 따라 기술의 평가와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에 의해서 수용되어 이용되거나 제도화되는 조직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Meyer and Goes, 1988: 897).

기술지식의 소화와 흡수에는 기술지식을 수용하는 수용자의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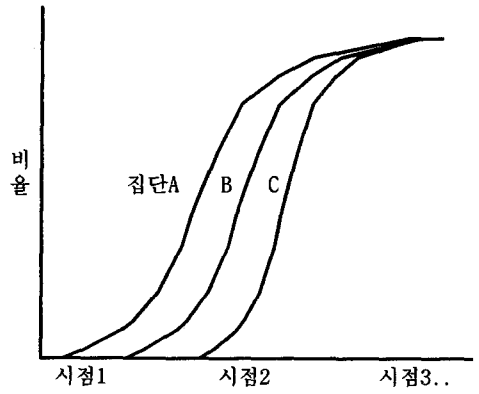
어야 한다. 기술지식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술 지식의 수용 능력은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의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기존의 관련지식은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화하고 실용적 목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Cohen and Levinthal, 1990: 128-129). 실제로 기존 지식의 정도가 이전된 기술을 수용하는 능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Murphy, 1986). 이것은 기술이전에 성공한 나라들이 특히 일본과 같이 잘 교육된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밝혀졌다.

지식이 강압적으로 이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식 수용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Dahlman and Westphal, 1993). 외부적 지식을 내재화하려는 의지나 노력 없이는 기술지식의 흡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기술지식의 이전은 불가능하며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정한 기술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혹은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개인적 선택의 결과이다. 개인적 판단에 따라 특정한 기술지식이 수용되거나 수용되지 않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각하는 주체의 욕구, 기대, 경험, 가치관, 학력, 나이 성 등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Skinner, 1974)는 점에서 특정한 기술지식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지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은 기술지식의 확산과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격차의 해결: 비관론과 낙관론

정보격차에 대한 낙관적 관점은 기술 확산의 정상화 모형<그림 1>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보격차를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기술 확산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술의 초기 수용 집단과 후발 수용 집단간의 기술 수용의 시차로 인해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집단에게 확산될 것이므로 기술 수용의 포화단계에 이르면 누구나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Norris, 2001: 30-31). 가격의 하락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정보통신매체가 보편적인 매체가 됨으로써 정보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용 컴퓨터나 인터넷의 경우 컴퓨터 가격의 인하, 컴퓨터의 무상 공급이나 구매 지원, 무료 서비스의 제공,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가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도입 초기에 비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급속한 속도로 이용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누구나 싼 가격으로 손쉽게 구매,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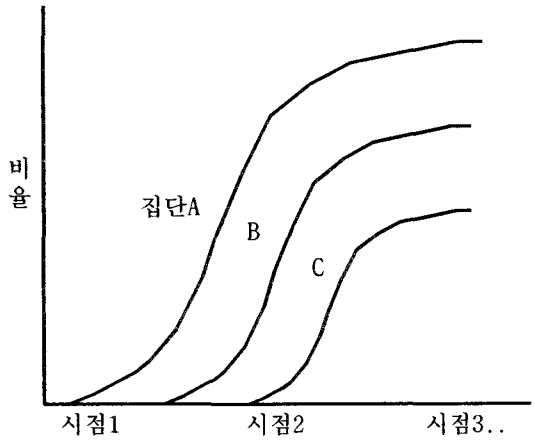
<그림 1> 기술확산의 누적적 S곡선: 정상화 모형



자료: Norris(2001: 31), 그림 2.2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비관적 관점은 정보격차가 자연스럽게 감소 혹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기술 확산이 누적적 S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낙관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수용집단과 후발 집단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계층화 모형<그림 2>에 근거를 두고 디지털 경제 하에서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조기에 수용한 초기 수용집단들은 후발 집단들에 대한 그들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그림 2> 기술확산의 누적적 S곡선: 계층화 모형



자료: Norris(2001: 31), 그림 2.2

정보격차에 대한 비관적 시각은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는 지식격차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강휘원, 1999: 61). 정보격차의 원인을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 능력의 만성적 부재와 정보통신기술 및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라는 것이다(한국전산원, 2001b: 18). 즉,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정보격차는 확산과정의 단순한 과도기적 산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1] 따라서 정보격차는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불평등'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서이종, 2000: 2-7)과 그 맥을 같이 한다.[2]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주민들에 더 많은 고용과 교육의 기회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기의 무상 보급과 무료 정보화 교육기회의 제공, 무분별한 시장경쟁체제의 지양과 정보 공유 및 정보의 공공성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3) 다차원적 개념으로서의 정보 격차와 개인적 선택

정보격차는 정보화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예: 김문조 · 박형준, 1996; 김민희, 2003; 김생수, 2003; 김주찬 · 민병익, 2003; 김태룡, 2003; 김기홍, 2004; 박명희 · 이성림, 2004; 김태일 · 도수관, 2005). 정보 격차의 원인으

---

1)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본주의의 틀 속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들이 사회적 생산관계의 구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에 의하면 정보사회로의 진전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기존의 생산방식이 자본 축적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 정보를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본다. 정보는 '이용가치가 풍부한 자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며, 그를 둘러싸고 보다 많은 경제적 가치의 수취를 위한 사회적 · 정치적 갈등과 가치교환이 일어난다.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은 자본주의사회의 내적 논리에 의해 규정된다. 상품으로서의 정보는 여타의 물질적 상품과 물리적 속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 동일하게 기능한다고 본다(소영진, 1995).

2) 정보격차는 정보 확산의 과도기에서의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다양한 사회적 격차 및 불평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조건이 열악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지닌다.

로는 초기에는 물리적 접근성이 주로 지적되었다. 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정도는 기술의 공유와 보편화로 어느 정도 극복될 가능성이 있음은 사실이다. 실제로 물리적 접근(physical access) 가능성에 따른 격차는 컴퓨터 보유의 증가나 인터넷 호스트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드웨어 가격의 급격한 저하와 성능 향상, 사용 편의성의 개선, 인터넷 접근 비용의 저하, 네트워크 외부성[3] 등을 근거로 컴퓨터의 보유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의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는 주장(Compaine, 2001: 321-326)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용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이 성공적인 기술 확신의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들처럼 일반적인 확산의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기술추격(technology catch-up)이나 침투(trickle-down) 효과를 통해 컴퓨터의 보유나 인터넷의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보 이용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의 보유나 인터넷에 대한 접속 여부만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유형이나 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Thomas and Wyatt, 2000: 21). 이용의 증가가 곧 정보의 평등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용 능력 혹은 역량의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해결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강휘원, 1999; 황혜선, 1999; 서이종, 2000; 한국전산원, 2000; 조정문, 2001; 김생수, 2003; 박해광, 2003; Hwang and Ko, 2004). 동일한 수단을 소유한 개인들 간에도 응용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보에 대한 접속 가능성만이 정보빈곤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보 빈곤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통신 기술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좌우되지는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3) 네트워크 외부성은 네트워크 이용자의 증가로 네트워크 이용자의 총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물리적 접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Hague and Loader, 1999). 비용지불능력의 제약,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사용의 제한, 사용 가능한 경제적 환경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접속만으로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물리적 정보접근 가능성과 함께 인지적 이해능력과 관련된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격차는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다차원적 개념(Bertot, 2003)으로 물리적 접근성이나 이용능력 외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의식적 차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비이용도 정보격차의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정보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뿐 만 아니라 정보기기나 정보자료를 선용하려는 의욕 및 수용태도와 같은 의식적 차원의 측면도 포함하기 때문이다(김문조 · 김종길, 2002). 동기의 문제가 정보격차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지만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보유하지 않는 자(have-nots)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서 경시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희박하다(김봉섭, 2006: 156). 이렇게 볼 때 정보격차 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자발적 선택과 같은 의식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선택에 의한 정보 격차

1) 정보 격차의 추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나 컴퓨터의 보유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감소는 비용의 저하와 초기에는 매우 비싼 기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이 저하됨으로써 기술이 제공하는 편익을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되고 시장 규모도 커지게 되는 '침투(trickle-down)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격차의 해결을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관점에 따를 경우 인터넷이나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 저하됨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의 경우 초기에는 사용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학교 예산이나 군수 계약에 의해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에서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자들 뿐 아니라 기업, 단체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Thomas and Wyatt, 2001: 26).

기술의 확산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술의 확산속도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다른 어느 매체보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 역시 멀지 않아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매체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술 확산이 반드시 쉽고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혁신은 대개 초기 단계에는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들을 해결해야 하며 모두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기술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기술을 쉽게 채택하지 않는다. 기술의 개선이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기술 채택을 뒤로 미루는 결정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Rosenberg, 2001: 158-181).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부터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가입률, PC 보급대수, 유선전화 회선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전자서명 건수 등의 모든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2001년의 56.56%에 불과하던 것

이 2005년에는 72.8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계층 간의 이용에 있어서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도 지역별 격차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정보통신부, 2006). 이런 추세를 고려할 경우 정보격차의 지속적 완화를 통한 단기간의 해결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가 물리적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물리적 접근과 이용의 증가만으로 정보격차의 완화 혹은 해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정보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를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정보격차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정보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전체 국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격차지수가 평균 8.3점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정보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123.8), 사무직 종사자(134.5)와 20대(131.4) 등의 정보선도계층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정보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표 1> 정보격차지수 비교

구분	2004년		2005년		전년대비 지수감소폭(점)
	격차지수(점)	전체국민대비수준(%)	격차지수(점)	전체국민대비수준(%)	
장 애 인	42.5	57.5	34.8	65.2	7.7↓
저소득층	44.4	55.6	35.8	64.2	8.6↓
농 어 민	66.2	33.8	58.3	41.7	7.9↓
장노년층	59.1	40.9	50.7	49.3	8.4↓
평균	55.0	45.0	46.7	53.3	8.3↓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9)

2) 무시된 연계: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개인적 선택, 정보격차

전화나 케이블 서비스, 컴퓨터의 보유나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 자발적인 비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비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컴퓨터 가격의 하락, 소득 향상과 컴퓨터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비용지불능력에 따른 격차는 단 몇 년 만에 크게 해소되었다. 그러나 개인적 선택에 의한 정보격차는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는 미국인이 전체의 50%에 달하며 그중 절반은 접속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idges.org, 2001: 90; Compaine, 2001). 심지어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유나 인터넷 접속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발적 비이용자의 절대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Compaine, 2001: 328).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이용률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재 전체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27.2%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5년 12월의 조사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이용자가 전체의 6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인터넷 이용률이 현재보다 낮았던 2001년 6월의 조사에서는 44.5%만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지만 5년 사이에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비율의 증가가 인터넷 이용을 포기한 숫자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비이용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기 때문에 상대적 비중이 높

4) 인터넷 이용률은 만 6세 이상의 국민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2005 ITU Internet Report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말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31,1580천명이고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는 65.68명으로 세계 7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약 4.6% 정도의 차이가 있다.

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터넷 비이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선택에 의존한다. 따라서 필요성이 없다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비접속의 원인은 개인적 선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2> 인터넷 비이용 이유[5]

조사년월	필요성 못 느낌	이용방법모름	이용비용부담	장비미비	시간없음	기타
2001. 06	44.5	27.5	2.0	14.9	10.9	0.2
2001. 12	42.9	24.9	1.5	11.4	17.8	1.0
2002. 06	47.9	22.9	0.6	11.6	16.7	0.2
2002. 12	40.3	31.9	0.9	12.1	14.4	0.4
2003. 06	44.4	36.3	0.9	6.5	7.6	3.6
2003. 12	46.1	33.2	0.9	7.9	9.7	2.0
2004. 06	55.9	30.1	1.1	5.8	6.0	1.1
2004. 12	64.5	21.6	1.6	2.7	9.0	0.7
2005. 06	65.4	21.8	1.0	5.0	6.0	0.6
2005. 12	68.1	19.7	0.9	3.0	6.9	1.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2000.12-2005.12.

'시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터넷 이용에 특별한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일을 포기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만한 상대적 가치가 없거나 낮다는 판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선택에 의한

5) 2003년 12월 이전의 경우 기타 항목에는 '사용불편', '회선 문제', '아이들 이용 염려', 무응답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2005년 조사의 경우 '아이들 이용에 대한 염려'와 '개인정보, 보안,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항목이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비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비율은 2000년 12월의 16.5%에서 2005년 12월에는 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두 응답을 합할 경우 선택에 의한 비이용자의 75%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비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표 3>, 인터넷 비이용자 중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와 같이 개인적 선택에 따라 비이용을 선택한 사람들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 개인적 선택에 따라 비이용을 선택한 개인들이 그들의 의지를 바꾸지 않는 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정에서 개인들간의 정보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는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적 선택과 정보격차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정보격차의 영향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도 않다.

<표 3> 선택에 의한 인터넷 비이용 비율[6)]

(단위: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터넷 이용률	56.56	59.39	65.48	70.23	72.82
인터넷 비이용률	43.44	40.61	34.52	29.77	27.18

3) 정보격차의 영향 변수로서의 개인적 선택

정보격차는 일차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접속과 비접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는 접속

6) 비이용률 평균은 <표 2>의 해당년도 6월과 12월의 응답자 비율을 평균한 것이며, 선택에 의한 비이용률은 '필요성을 못 느낌'과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합한 것이며, '전체 중 비율'은 이용률과 비이용률을 합한 전체 비율(1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집단과 비접속집단의 단순한 구분은 아니다. 비접속자의 경우에도 이들은 동질적인 집단은 아니다. 따라서 이차적으로는 비접속자들을 보다 세분화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컴퓨터의 구매나 인터넷에 대한 접속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로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의 가격이 하락하고 쉽게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구매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정보격차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득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접속 비용이 낮아질 경우 소득수준의 영향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저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인 거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을 인식하고 활용할 만한 충분한 지식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심각한 경제적 사정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불가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조건을 극복할 방법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Mack, 2001: 35-36).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경우 경제적 조건이 개인적 선택보다 더 중요한 정보격차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여유가 있음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 선택이 중요한 설명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경우 일단 기술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접근하기만 하면 지속적인 접속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처음 사용해 본다고 해서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열성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누구에게나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용이나 접속을 그만둘 수 있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나 인터넷을 한번 이용하거나 접속했다고 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

속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처음 접속한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중도에 접속이나 이용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homas and Wyatt, 2001: 27-31).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정보격차는 일차적으로 접속과 비접속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비접속은 의도적 비접속과 비의도적 비접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선택에 의한 비이용이나 비접속 상황이 정보격차의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관점에서는 격차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발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관련지식의 보유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보 격차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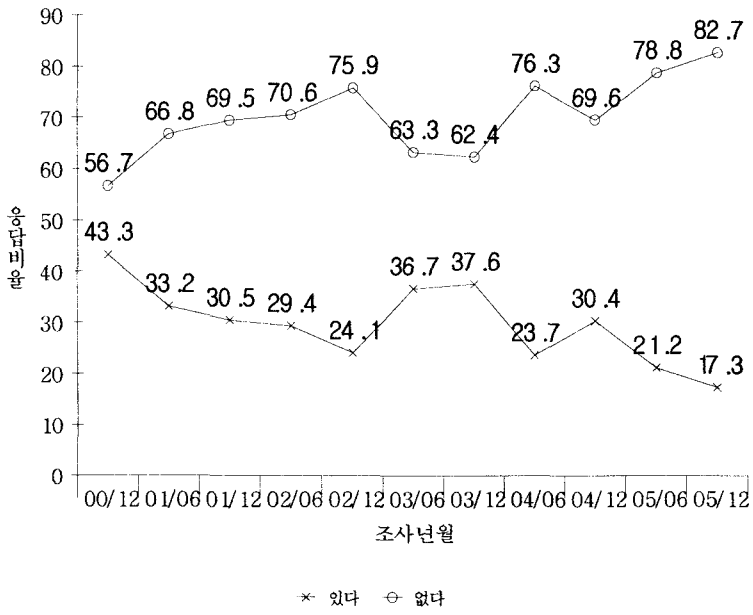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정보격차와 관련된 집단들은 정보화 선도집단, 정보화 이용·활용집단, 정보소외(격차)집단(박상규 · 원구현 · 김창덕, 2003)이나 정보 활용집단, 욕구집단, 정보 소외 집단(한국전산원, 2000; 조정문, 2001) 등으로 구분한다. 정보화 선도 집단이나 정보 활용 집단은 실질적 접근수단을 보유하고, 정보화 의지도 높은 집단을 말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 욕구집단은 정보화 의지는 있지만 접근과 활용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정보 활용 능력의 향상 가능성은 높다. 반면, 정보 소외집단은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수용의 의지도 없는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소극적이고 인터넷에 대한 미래에 관하여 비관적인 경향이 높으며, 스스로 정보화를 받아들일 의지가 낮다(박상규 외, 2003). 마지막으로 정보 이용 능력과 접근 수단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의지가 없는 집단은 선택에 의한 자발적 소외된 집단으로 정보 무관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무관심 집단은 그동안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 전혀 다루어지지 않

았다. 자발적 선택에 의한 정보 소외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이용자들이 향후에 인터넷을 이용할 의향은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의 경우 82.7%가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그림 3>. 물론 여기에는 자발적 선택 뿐 아니라 이용 조건의 미비와 같은 외부적 조건에 의한 비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높은 응답 비율로 보아 선택에 의한 자발적 정보 소외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 비이용자들 중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적 선택에 따른 이용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정보격차의 해소에 있어서 개인적 선택에 의한 정보격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확산의 정상화 모형과 격차가설에 바탕을 정보격차에 대한 낙관적 혹은 비관적 전망은 모두 기술 확산의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지식의 확산과정에서는 이런 객관적 조건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관적 요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적 선택에 의한 비접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낙관론적 관점의 주장처럼 정보격차는 자연스러운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자발적 소외를 정보격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거나 극소수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정보소외를 선택한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쉽게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 이들이 계속 상당수의 규모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와 정보의 제공을 위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자발적 소외집단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이들을 위한 서비스나 정보 제공의 통로나 수단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3> 비이용자들의 향후 인터넷 이용 의향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2000.12-2005.12.

4. 결론 및 함의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능력은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부의 분배 상태나 성, 연령, 지역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확산의 속도, 기술사용 지식, 정부의 정책, 제도의 구성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정보 이용의

객관적 상황을 주요한 변수로 생각해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 지표로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 정도는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의지, 태도나 신념 등에 기초한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 선택에 의한 자발적 소외가 정보 격차의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포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보 격차에 대한 논의와 대책의 주 대상이었던 정보 소외집단이나 욕구집단 뿐만 아니라 정보 무관심 집단을 포함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의지에 따라 정보 소외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선택에 의한 자발적 정보 소외집단의 존재와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에 의한 정보 격차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구조적 소외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온 정보격차와는 구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격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격차를 구조적 소외와 결부된 제한적 개념으로 본다면 의식적 차원과 관련된 자발적 선택에 의한 '원하지 않는 자'들은 정보격차로 인한 구조적 소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기적 차원의 문제가 정보격차에 대한 접근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예: 김봉섭, 2006)는 점에서 자발적 선택은 정보격차를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현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선택에 의한 비이용 혹은 비접근도 정보격차의 다양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로부터 소외를 선택하는 것도 정보격차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 초래된 정보격차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둘째, 선택에 의한 정보 격차의 문제는 완전한 정보 격차의 해소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정보화가 누구에게나 고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계층구조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정보혁명의 수혜집단이 될 수도 있고 손실집단이 될 수도 있다(Webster, 1997: 93). 인터넷은 독립된 현실이라기보다 동일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Wellman and Gulia, 2001).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완화나 해소가 정보격차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할 것 같지는 않다. 기술지식의 확산 과정에서 모든 개인들이 특정한 기술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편리하거나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화가 제공하는 이점과 편리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러한 이점을 활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격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셋째, 정보화 무관심집단의 존재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다. 시간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유인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비용이 이익이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으로 얻는 이익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 무관심집단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콘텐츠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근과 이용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화

시켜줄 수 있는 것보다 오락적인 내용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자발적 선택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포기에 의해 초래되는 정보격차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넷째, 정보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과 수단 선택에 있어서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혁신의 과정에서 분명하고도 많은 장점을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수용자들의 폭넓은 인식하에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혁신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우 느린 속도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바탕을 둔 정보화가 일반의 예상과 달리 확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기술의 이용과 접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소간의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소외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소외를 선택한 집단과 외부적 상황 조건으로 인해 소외를 선택한 집단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정보화 교육이나 정보통신 기기 이용료의 감면 등에 한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나 이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활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 활용의 이점이 비용에 비해 높아지도록 하거나 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시에 모든 정보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해결해야한다는 접근과 대응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는 물리적 접근성이나 이용 능력의 향상 문제와 함께 개인적 선택이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리적 선택 모형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문제의 모든 원인과 대안, 대안간의 명확한 비교나 선택된 대안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현실적으

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물리적 접근성, 이용능력, 활용 욕구로 구분하고 물리적 접근성의 강화, 이용 능력의 향상, 욕구 향상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분절적(disjointed)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발적 선택은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 다양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선택과 같은 의식 혹은 의도의 문제가 정보격차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발적 선택의 문제를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로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개인적 선택 문제를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또 자발적 선택이 정보격차와 관련된다고 할 때 이러한 선택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동기와 이들 간의 인과적 관계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용도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유출과 같이 정보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정보접근과 활용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신뢰(예: 사이버 범죄의 예방, 정보유출의 방지, 프라이버시 확보 등)에 대한 기대와 자발적 선택과의 상관관계를 들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휘원 (1999),「정보화시대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경제학」,『한국정치학회보』, 제33권, 3호. pp. 157-178.

김기홍 (2004),「국제적 정보격차,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국제경제연구』, 제10권, 3호, pp. 263-288.

김문조 · 김종길 (2002),「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 · 정책적 재고」,『한국사회학』, 제36권, 4호, pp. 123-155.

김문조 · 박형준 (1996),「정보화사회의 부작용과 사회정책의 방향」,『정책포럼』, 제20권, pp. 14-53.

김민희 (2003),「학생 정보격차에 대한 학교효과 분석」,『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4호, pp. 91-115.

김봉섭 (2006),「정보격차연구의 성과와 한계」,『2006 정보격차해소동향』, 가을호, pp. 152-162.

김생수 (2003),「소도읍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확산방안」,『한국행정연구』, 제12권, 4호, pp. 3-32.

김주찬 · 민병익 (200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현황과 정책방향 연구」,『지방정부연구』, 제7권, 1호, pp. 75-96.

김태룡 (2003),「공무원의 정보격차 구조가 고객지향적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제37권, 2호, pp. 307-332.

김태일 · 도수관 (2005),「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분석」,『사회복지정책』, 제21권, pp. 341-364.

네이선 로젠버그, 이근 외 번역 (2001),『인사이드 더 블랙박스』, 서울: 아카넷. [Rosenberg, Nathan (2001), *Inside the Blackbox: Technology and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마크 스미스 · 피터 콜록 엮음, 조동기 번역, (2001),『사이버공간과 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Smith, Marc A. and Kollock, Peter (1999),

Communities in Cyberspace, London: Routlegde.]

박명희 · 이성림 (2004), 「부모자녀 간 정보격차에 따른 의사소통, 갈등, 소비자 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5호, pp. 11-25.

박상규 · 원구현 · 김창덕 (2003), 「인터넷 시장세분화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접근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2호, pp. 127-158.

박해광 (2003), 「정보격차의 새로운 경향」, 『경제와 사회』, 제59권, pp. 78-102.

서이종 (2000),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정보와 사회』, 제2권, pp. 68-87.

소영진 (1995), 「정보의 개념과 정보사회의 의미」,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2권, 3호, pp. 26-37.

정보통신부 (2006), 『주요 IT통계 현황』, (2006. 04).

조정문 (2001), 「정보격차 현황 및 정책의 발전 방향」, 『정보화정책』, 제8권, 2호.

프랭크 웹스터, 조동기 번역 (1997), 『정보사회이론』, 사회비평사. [Webster, Frank (1997),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한국전산원 (2000),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2005 정보격차 현황 분석과 제언』.

황혜선 (1999), 「정보격차의 요인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원칙」,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4호, pp. 279-297.

Abrahamson, Eric (1991), "Managerial Fads and Fashions: The Diffusion and Rejection of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6, pp. 586-612.

Bertot, John Carlo (2003), "The Multiple Dimensions of Digital Divide:

More than the Technology 'Haves' and 'Have-not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20, pp. 185-191.

Bridges. org (2001), *Spanning the Digital Divide: Understanding and Tackling the Issues*, http://www.bridges.org/publications/65.

Cohen, Wesley M. and Levinthal, Daniel A.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5, pp. 128-152.

Compaine, Benjamin M. ed. (2001),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Cambridge, MA.: MIT Press.

Dahlman, Carl J. and Westphal, Larry E. (1981), "The Meaning or Technological Mastery in Relation to Transfer of Technolog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58, pp. 12-26.

Hague, B. N. and Loader, B. D. (1999), "Digital Democracy: an Introduction", in Hague, B. N. and Loader, B. D. eds., *D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Routledge, pp. 3-22.

Hwang, Jong-Whan and Ko, Suk-Nam (2004),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Differentiation of Digital Divide", 『산업경제연구』, 제17권, 5호, pp. 1691-1710.

Meyer, Allan D. and Goes, James B. (1988), "Organizational Assimilation of Innovations: A Multilevel Contextual Analysis", *American Management Journal*, Vol. 31, No. 4, pp. 897-923.

Norris, Pippa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nzi, L. and Koenig, M. (2002), "Knowledge management: Another

Management Fad?", *Information Research*, Vol. 8, No. 1, http://InformationR.net/ir/8-1/paper145.html. (2005. 3.12).

Rogers, E. (1995), *Diffusion of Innovation*, New York: Free Press.

Skinner, B. F. (1974), *About Behaviorism*, New York: Knopf.

Thomas, Graham and Wyatt, Sally (2000), "Access is not the only Problem: Using and Controlling the Internet", in Wyatt, S. et al. eds., *Technology and In/equality: Questioning the Information Society*, pp. 21-4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Digitally Divided by Choice and the Diffusion of ICTs

Jung, Byung-Kul

ABSTRACT

In spite of decreased attention to digital divide, i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realization of information society. At the outset, two conflicting explanations, optimism and pessimism, have directed their attention to objective basis of digital divide in common. They, however, have been neglected the fact that accessibilities can be varied not only by objective conditions but by subjective conditions such as individual recognition of necessity and willingness. Subsequent choices can be a crucial factor to determine whether to or not to access. In USA, over 50% of potential users determined not to access to the internet by their own will and choices. By the user survey on internet, 'do not feel the necessity' ranked the first reason not to use the internet in South Korea. The respondents who chose 'no time to use' tend to decrease but kept holding their shares, too. The relative importance of 'not to access' by individual choice have been increased. Whether the non-users of ICTs by choice is in or beyond the scope of digital divide, it evidently show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directing our attention to it on the

way to information society.

Key terms:
digital divide, choice, ICTs, technology diffusion